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 지역사업 파급효과 ‘낙제점’

■ 국회예산정책처 성과 보고서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업 육성사업비 집행률이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비해 2년 연속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도 타지역 공공기관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발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 22.5% 최하위권 대구·경남 등 실적 초과 ‘대조’...주민지원도 미흡

행률은 지난 2023년 74.8%, 지난 2024년에는 22.5%에 각각 그쳤다. 이는 두 해 동안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에 비교해 볼 때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

력은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2년 연속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기관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 집행 미달사유로 △착공 연기 △투자기기 조정 △매비 타당성 심사 수행 △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지역업체 참여 저조 및 미선정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 추진단은 해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사업

육성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도 예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에는 33.2%에 그쳤고, 지난 2024년에는 80.7%로 나아졌으나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23년 울산은 계획 이행 목표 초과해 집행률이 270.1%, 세종은 187.0%, 경북은 188.4%나 됐고, 지난 2024년 울산은 333.3%, 강원은 128.6%, 충북은 127.8%인 것으로 나타나 크게 대

조된다.

지역주민지원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로는 △사업추진·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수요 감소 △타 사업으로 대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해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코스피가 서울 연속 증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88p(0.75%) 오른 6690.90으로, 코스닥은 4.68p(0.39%) 오른 1220.2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9.0 원이다.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신용융자 다시 중단

코스닥도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코스피는 29일 전장 대비 49.88p(0.75%) 오른 6690.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2.02p(0.33%) 내린 6619.00으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해 증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이 각각 4780억원, 167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607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829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22만6000원 1.80%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현대차(0.18%), LG에너지솔루션(0.21%), SK스퀘어(2.34%) 등도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8p(0.39%) 오른 1220.2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30p(0.19%) 내린 1213.28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143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도 기관은 각각 200억원, 840억원 순매도했다.

높아지는 주가에 따라 ‘빚투’도 연일 최고점을 뛰어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내 증시 신용거래용 자금이 35조6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용 자금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지난 23일 역대 처음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고점을 높였다. 지난 10일(32조9014억원)부터 13

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이달에만 2조 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는 10조 8780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4조8116억원으로 1600억원이 늘었다.

신용융자잔고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은 다시 신용 대출을 차레대로 일시 중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신용융자와 증권담보융자(대출)을 지난 28일부터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도 29일부터 신용 융자한도를 일시 제한했다. 신용잔고 5억원 이내는 매매할 수 있지만, 신용잔고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용매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국투자증권은 30일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 신규약정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원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50kW 미만 ‘느린 충전’ 인하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오르고, 느린 충전기 요금은 인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요금(로밍요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전기차 충전요금 ‘상한선’과 같다. 만약 충전 사업자가 요금을 그 이상으로 올리면 전기차 운전자는 기후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충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기후부는 요금을 나누는 구간을 5개로 세분하기로 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현재 요금을 고려하면 느린 충전(충전기 출력 50kW 미만)은 요금이 인하되고 매우 빠른 충전(200kW 이상) 요금은 오르

공공 ‘5단계’ 개편...초급속 391.9원으로 인상 계절·시간대별 변동...휴게소 ‘외부 간판’ 설치

현행		개편	
출력	충전요금	출력	충전요금
100kW 이상	347.2	200kW 이상	391.9 (↑ 44.7)
		100kW 이상 ~ 200kW 미만	347.2
		50kW 이상 ~ 100kW 미만	324.4
100kW 미만	324.4	30kW 이상 ~ 50kW 미만	306.0 (↓ 18.4)
		30kW 미만	294.3 (↓ 30.1)

연립뉴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것이다.

기후부는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점도 요금제 개편 이유다.

충전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완속과 급속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한전불입금) 등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은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차주자 내는 충전요금도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공공 충전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하도록 규정과 급속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한전불입금) 등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은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연립뉴스

전남 서남부, 조선 호황 속 체감경기 ‘냉기’

■ 한국은행 목포본부 1분기 경제동향 발표

대불산단 고용·생산 동반 감소...수출 감소는 ‘착시’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가 조선업 생산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악화가 뚜렷해 대비된다. 소비 지표는 겉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오프라인 소매점은 오히려 매출이 줄었고, 건설투자 침체와 자영업자 금융부담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29일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1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분석 결과,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업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조선업체의 1분기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했다. 다만 직전 분기(9.2%)보다 증가폭이 줄었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예탈렌 등 원유 부산물 수급이 일시 불안정해지며 단기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 호황의 온기가 지역 산업단지 전방으로 퍼지지 않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2025년 4분기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했고, 고용 인원은 8.4% 줄었다. 주요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 위

주로 건조를 전환하면서 단지 내 협력업체들의 수요 물량이 감소한 탓이다. 대형사의 호실적이 중소기업체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59.3에서 51.3으로 8p 가까이 하락했다. 방문객 수 증가율도 직전 분기 13.8%에서 3.0%로 크게 둔화됐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더 어렵다. 올해 1분기 정책자금 대출이 재개됐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비용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지표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된다. 지역 주민의 개인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7.9% 늘며 직전 분기(6.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역 내 주요 소매점 매출액은 같은 기간 3.0% 감소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2025년 4분기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했고, 고용 인원은 8.4% 줄었다. 주요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 위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했고, 건축 허가면적은 37.3% 감소하며 낙폭이 더 컸다.

예외는 무안군이다. 해남 솔라시도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문의가 급증했다. 실제 올해 1~2월 무안군 주택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07.3% 증가했고, 주택매매가격지수도 1.4% 올랐다.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으로 달구고 있는 모습이다.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다. 다만 이를 수출 부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박 인도물량 자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적취득 조건부 내용 계약 방식으로 건조된 선박이 관세청 수출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수치가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전남 서남부 경제가 조선업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무안군의 부동산 흥풍이나 카드 소비 증가가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낙수 효과를 강화하고 내수 기반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경제 활성화·신뢰받는 조달서비스 제공”

이창호 광주지방조달청장 오늘 취임

이창호 제38대 광주지방조달청장(58·사진)이 30일 취임한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 청장은 광주저자재구매과장

과 서울청 공사관리과장, 본청 건설기술계약과장·시설사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며 조달행정 전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기술의 날 국토교통부장관상 표창에 이어 지난해 조달청 개청 76주년 기념 공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동일인 변경...공시 의무 추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우석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

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석씨는 사내에서 미국령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 표시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

연립뉴스